

光日春秋

정용덕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희비가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경쟁력 지수' 평가결과로서, 한국이 지난해 19위에서 올해는 24위로 떨어진 것이다. 조사항목 가운데 정부부문 경쟁력에 직결된 '창업관련 행정절차 수'에서는 85위, '정부지출 낭비'에서는 73위를 각각 차지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 브라운대학교가 실시한 '글로벌 전자정부' 평가결과로서, 한국 정부가 '홈페이지 관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19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것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32위와 86위였다고 하니 선풍적인 인기를 만든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국제경쟁력 지수'나 '부패인식 지수'나 하는 국제비교 결과들은 측정 지표 설정에 있어서 혹은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 사회과학적으로는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 때문에 평가결과가 들쭉날쭉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년도별로 발표되는 국가별 순위를 놓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대체적인 변화의 경향을 헤아리면서 자국의 강점과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항목들을 정책추진과 정에서 참고로 삼으면 족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년에 한국이 '홀

위에 올라서 있다. 전자정부 추진에서만은 일본을 비롯한 많은 경제대국들보다도 훨씬 앞서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며, 이른바 21세기형 '지식정보국가'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행정학회가 최근에 공동으로 개발한 이른바 '전자정부 5단계 모형'에서 한국은 4번째 단계인 '전자거래'의 수준에는 도달해 있으나, 5번째 단계인 '마디 없는 통합'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단계로의 진입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에

그 정보를 활용한다고 하면, 전자정부의 효과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나 조직들이 축적해 놓은 지식정보를 서로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마디 없는 통합'의 단계를 의미한다.

물론 정보공유와 그로 인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가치의 이면에는 시민들의 사적 정보보호라는 가치도 또한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완벽한 기술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걸림돌이 있다. 자신이 공무수 촉적해 놓은 자료를 심지어 후임자에게 까지도 인신인계를 꺼리는 행정행태나 유난히도 두꺼운 정부부서 간의 벽은 모두 행정정보의 공유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시민들의 각종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정보공유추진' 사업과 법실사유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 사업을 최근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것에 기대를 걸어 본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정부 제5단계 진입의 과제

페이지 관리'에서 크게 발전했다는 앞의 보도에 의의가 없지 않다. 이미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 인구 2인당 1대 이상의 개인 컴퓨터 보급, 초고속 전산망 구축, 거의 모든 서류의 디지털화, 전체 가구의 73%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 전체 인구의 약 4분지 3이 (그것도 70%이상의 이용률로) 인터넷 사용 등은 거의 세계적인 기록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하부구조를 바탕으로 한국은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세계 5위, 그리고 국가정보화 지수에서는 세계 3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력을 통해 전자정부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일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렇게 구축된 하부구조를 활용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와 사회구조적인 사안에 결부되는 좀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추진의 마지막 단계인 제5단계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에는 개인간 혹은 조직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포함된다. 민원 공무원들이 각자 자신만의 지식정보를 컴퓨터에 축적해 놓고 혼자

시설

북핵사태, 국론결집·초당적 대처 절실하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불허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여타 도발행동에 나선다면 곧바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운명이 북한의 추후 행동과 국제사회의 대응 내용을 하나로 모아 확고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달려 있다.

한반도 안보 현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확한 상황인식과 냉철하고 정밀한 상황관리, 그리고 위기 대처를 위한 국론결집이다. 여야 정파를 떠나 보수나 진보의 이념을 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 확고한 정책결정을 내린 뒤 북핵 사태에 결연한 자세로 대처할 때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북 핵실험이 후 대북 포용정책과 북핵 해법을 놓고 여야와 진보·보수단체 간에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등 내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의 다툼으로 국회의원들의 대북 결의안 채택마저 무산된 것은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국가안보에 우선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 소모적이고 정파적인 공방이나 할 때인가.

한반도 안보가 백책간두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론 분열은 과도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이것이 경제불안 등으로 비화될 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다. 정치권이 북핵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론을 결집해 현 사태에 결연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이해 득실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학교주변 위협시설 비율 광주 1위라니...

광주지역 초·중·고 주변의 위협시설물 설치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전체 학교의 16%인 45개교 주변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가스 및 석유저장소와 고압 송전탑, 대규모 건축현장 등 위협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학교 주변 위협시설물 설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서울 14%, 경기 10%, 대구 6%, 부산 5%인데 비해 광주가 16%에 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가. 그만큼 광주의 교육환경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위협시설물은 자칫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고압 송전탑은 전자파를 발생시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협시설물이 설치된 광주지역 학교 중 초등학교가 24개교 가장 많았다. 방어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초등학교들이 사고위험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무엇인가.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업소나 위협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 위협시설물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와 모텔, 여관 등 수많은 유해업소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갑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은 혼란스러움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정화구역인지 오염지역인지 구분하기 힘든 현실에서 학부모들의 심정은 또 오죽하겠는가.

교육당국과 행정기관은 학교주변 위협시설물 비율 전국 1위라는 사실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위협시설물과 유해업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육환경이 중요한 만큼 학교정화구역의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 록음악의 대부'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신화 '한국적 록의 완성자' 지난해 데뷔 50년 기념 전국 순회 은 퇴공연을 가졌던 한국 대중음악계의 원조 로커인 신중현씨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신중현씨가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긴 발자취는 깊고도 넓다. 록을 비롯한 서구 대중음악의 주요 장르들이 그의 손에 거쳐 국내에 전파됐다. 김추차, 필리스터즈 등 한 시대를 휩쓸었던 최고 스타들을 만들어 낸 것도 그것이고 '미인' '커피한잔' '아름다운 감상' 등 술 한 잔에 취한 록을 작사·작곡해 대중음악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그는 여섯 줄 기타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았다. 자서전 제목도 '내 기타는 잠들지 않는다'였다. 17세 때인 1955년 동두천 미 8군 무대에서 연주를 시작한 것이 음악인생의 출발이었고 62년에는 한국 최초의 록밴드인 '에드 포'를 결성해 그룹사운드를 한국에 정착시켰다. 73년에는 3인조 밴드인 '신중현과 엽전들'을 결성했

으나 엽전이라는 별칭을 돌려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의 반세기 음악 인생중에는 당연히 혹독한 시련기도 있었다. 지난 75년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휘말려 4년동안 방송은 물론 공연과 음반 판매까지 금지당했으나 뜨거운 열정으로 시련을 이겨냈다.

지난 10일 서울 고법 민사5부는 신씨가 노랫말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넙은 먼 곳'의 작사자가 유호식 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신씨가 작사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만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 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신씨의 음악적 명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중들 입장에서 작사자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한 사안인 아니다. 작사자가 바뀌었다고 좋아하던 음악이 싫어질 리 만무하다. 노래만 좋으면 그만 아닌가. /김재철 사설2부장 ajkim@kwangju.co.kr

신중현



기고

김광윤



광주·전남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를 웃돈다.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엔진의 쉼이다.

IMF 시절 한국이 대만을 부러워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기반 위에 경제기반을 다져 외화보유고 세계1위를 달성했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이 든든한 뿌리를 내림으로써 대만 경제를 지탱해준 결과였다.

지역 중소기업은 스스로 자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힘에 의해 육성될 필요가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체의 '활약'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을 설립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방중기청의 존재나 흡수통합 여부

는 정권의 교체나 그저 단순한 행정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이 지역을 살려왔고, 그 중심에 지방중기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보듯 대 중기청과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중기인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다르다. 중기청은 중기인을 진정한 지방경제의 주인으로 대접한다. 그들은 연구개발, 생산, 경영,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현신하는 지원을 해오면서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처럼 군림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지방중기청이 행정기관으로 불

지방중소기업청 존속돼야한다

필자는 중소기업인으로서 관련협회의 임원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왔으나, 그 때마다 짹짹 놀라곤 했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이 중기청의 지원정책과 겹쳤던 것이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노후가 커져서 쌓여왔다는 것을 증거한다.

최근 또 일간지에 지방중소기업청이 지방정부에 흡수통합돼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에 때문에 몇번이고 되짚고 곰씹어봐야 할 일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인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소기업은 지역내에서 싹틔고 같은 존재다. 끊임없이 지역에 공헌해왔고 앞으로도 공헌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기관이 존속돼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책권자들이 어떤 논리로 지방중기청

합된다면 중기청이 지난 수십년의 전문지식과 중소기업 지원노하우는 사장되고 말 것이다. 막강한 인체의 유실도 피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정책모토가 뭐가. 지역 균형발전 아닌가. 그렇다면 지방중기청을 더욱 더 강하게 지원,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차제에 정부는 중기청의 흡수통합에 고민할 게 아니라 지역 중기청에 전문적인 인력들을 보강해 보다 조직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방중기청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곧 지역 중소기업의 회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중소기업과 지방중기청은 뿔뿔히 떨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정부에 알리아 한다.

어린 싹이 커서 든든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자면 전담보육사가 필요하듯이, 지역 중소기업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중기청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이코비오 대표이사

도서판 짚겨진 책·낙서... 문화인 에티켓 실종

얼마전 찾은 자료를 있어 시립도서관에 갔는데, 책 곳곳에 불렌으로 줄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내용 일부가 짚겨진 잡자·논문 등도 많았다.

도서관에서 책 일부를 찢어가지 말자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했지만 내가 당하고보니 여간 난감했다. 추해형으로 발간된 신문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찢어가는 자료를 찾아가 힘들었다.

도서관에는 복사기가 설치돼 있어 원하는 자료라면 복사할 수 있다. 수백원의 복사비용이나 복사용 카드 구입비가 아까워서일까. 아니면 귀찮아서일까.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버려야 한다. 다른 이용자를 생각하지 않고 책에 줄을 긋거나 갈로 찢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서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인준·광주시 북구 운정동

기고

임승호



광주시교육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선거전은 더욱 혼탁해지고 선거법 위반사태도 늘고가고 있다. 정치에 신물이 난 일반시민들은 지난 7월 31일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와 오는 10월 23일 실시될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 흔적선거에서 또 다른 정치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저급함에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시민들은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도 여전히 냉담한 껍댄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스승의 그림자조차도 밟지 않았다.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를 겸한다. 선생님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우리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진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화·조직화 되어있다보니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유능한 학부모가 운영위원이 되고, 그 운영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자들과 함께 '정치적·조직적 연계고리'를 형성한다. 그 결과 선거관에서 건전한 정책과 참여는 없는 불법거래와 조직적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작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년여에 걸쳐 전문가 연구,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개혁

교육감 선거, 정치판 다투아선 안된다

나라처럼 융성한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정작 교육계가 우리나라에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자재와 급식 관련 납품비리, 성추행과 인권유린, 학교폭력, 재단비리, 입시부정, 촌지 등 우리 사회의 주요문제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계 아닌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가운데 하나가 교육위원·교육감선거에 있다고 생각한다. 돈선거·정치공작과 음모·패거리 정치를 통해 교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문화에서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쓰 뿌리'를 논리 시작할 수 있다. 학교교수님들과 운영위원들이 표를 담보로 향응이 오가며 '표'를 거래 하고,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유망한 교육감 후보에 줄서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의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선거판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 현재 자치교육에 관한 제도

안을 도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안 국회에 발의했다. 그런데 법개정 발의 후 1년6개월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직원 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대가 너무도 거세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금 우리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학교운영위원들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의 장래가 걸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각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비전과 실현가능성을 담은 정책으로 선거전에 임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들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21세기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좋은 교육체계'를 만들어갈 유능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희망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립공원 계곡 삼পুর로 머리감아서야

지난주 말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명의 자녀를 데리고 지리산 국립공원 계곡을 찾았는데, 계곡 한 지점에서 중년 부부가 삼পুর 이용에 머리를 감고 있었다.

아영을 한 뒤 텐트를 걷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아직도 국립공원 계곡에서 머리를 감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등

산객이나 야영객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파태로 부과 문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수많은 남녀노소 등산객이 찾는 국립공원 계곡에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안된다. 자연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쓰는 것이니 이용하지 않는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응두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禰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1426호 1992년 11월 20일 2차등록번호 501-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29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지부 2200-616	문화생활부 2200-626	(FAX) 2200-521	(FAX) 2200-551
경제부 2200-617	여론제작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사회1부 2200-618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222-4267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X 02-773-9335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